

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19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김성주 · 정필모
강선우 · 윤미향 · 권인숙
김상희 · 송재호 · 이용선
정춘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인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양부모에 대한 심사 등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법 적용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함(안 제1조).
- 나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진행할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가정환경, 건강 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(안 제11조).
- 다.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(안 제14조).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의 적격성 확인, 양자가 될 아동과 입양 신청인과의 결연, 사전위탁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18조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 입양 신청인에게 결연된 아동을 위탁할 수 있음(안 제20조).
- 바. 양자 또는 검사는 양부모가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음(안 제26조).
- 사.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함(안 제30조).
- 아.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며, 필요한

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5조 및 제36조).

자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, 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9조 및 제4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(의안번호 제1345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입양특례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(養子)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상 아동을 말한다.
2. “입양아동”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.
3. “부양의무자”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.
4. “입양전제위탁”이란 제20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이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아동통합정보시스템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아

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.

제3조(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)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)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영리 운영의 원칙)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익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또는 그 밖의 이익의 취득을 방지하여야 한다.

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간에 입양을 의뢰·알선 또는 조장·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입양의 날)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,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

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3.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
4.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
5.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
6.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
7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

④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국내입양 우선 추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

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9조(「민법」과의 관계)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아동통합정보시스템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,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,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「아동복지법」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- ③ 제3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·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

제11조(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1. 보호자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입양을 의뢰한 아동
2.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보장시설(이하 “보장시설”이라 한다)에 보호의뢰한 아동
3.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
4.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

장·군수·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,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제20조에 따른 입양전제위탁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 전까지 제1항의 아동을 직접 보호·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 등에 해당 아동을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가정환경, 건강상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제10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있어서 가정형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

제12조(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)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양이 결정된 아동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·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후견인이 된다. 다만, 해당 아동

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. 다만, 친권자가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친권이 정지된 경우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 절차,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양부모가 될 자격 등)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소득·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
2.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3. 아동학대, 가정폭력, 성폭력, 마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없이 있을 것

4. 약물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
 5.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
 6.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할 것
 7.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
-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양부모가 될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신청 등)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양을 신청한 사람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이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,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8조에 따른 입양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

왜곡·은폐·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경찰관서, 공공기관,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입양의 신청 방법·절차 및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입양의 의사표시) ① 입양대상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.

② 입양대상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.

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.

1.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, 다만,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.

2.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

받을 수 없는 경우

④ 제1항에 따른 동의·승낙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동의·승낙, 제2항에 따른 승낙 및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.

제16조(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) ① 입양대상아동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
2.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.

1. 친생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(遺棄)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제3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.

제17조(입양동의등의 요건 등)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의·승낙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(이하 “입양동의등”이라 한다)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.

② 입양동의등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,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입양동의등 전에 입양될 아동, 법정대리인 및 친생부모에게 입양동의등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, 친생부모에게는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,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상담내용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입양심의위원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(이하 “입양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
2. 제19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결연에 관한 사항

3. 제20조에 따른 입양전제위탁에 관한 사항

4.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제입양 추진 등에 관한 사항

② 입양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결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연한다.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, 제8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,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,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결정 이후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입양전제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결연된 아동을 입양허가 결정 전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전제위탁 기간 중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과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전제위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
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입양전제위탁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제21조에 따라 입양 허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입양전제위탁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가정법원의 허가) ① 신청인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
2. 제11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고서
3.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서류
4. 제19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
5.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
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,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가정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입양전제위탁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신청 절차,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

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장 입양의 효력

제22조(입양의 효과)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「민법」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.

제23조(입양의 효력발생) ①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4조(아동의 인도) 아동의 부모,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전제위탁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직접 인도한다.

제25조(입양의 취소)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양자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.

제26조(과양) ① 양자 또는 검사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과양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가정법원은 과양이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③ 가정법원은 과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양자의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.

제27조(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)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과 함께 아동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이 때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17조에 따른 자격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아동일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동의 및 승낙과 함께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도 받아야 한다. 다만, 아동의 본국법에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지원

제28조(보호조치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
2. 제26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파양의 청구를 인용하고 그 확정 사실을 통보한 아동

제29조(양육보조금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, 의료비, 아동교육지원비,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(사후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한다.

② 이 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제31조(사후서비스 제공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에 필요한 서비스
2.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3.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

제32조(입양정보의 공개 등)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 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(이하 “정보공개청구”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1촌 이내의 직계비속(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)은 자신의 직계존속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.

③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제3항 본문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.

1.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
2. 양자가 된 사람의 중대한 신체적·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구인에게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.

⑦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, 신청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(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신청) ①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아동권리보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, 제4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친생부모의 정보공개 사전 동의) ① 양자가 된 사람의 친생부모는 제32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청구에 대비하여 그에 관한 사전 동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.

1.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

2. 입양 성립 이후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에게 신청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같은 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의사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양자가 된 사람 또는 그의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동의를

받지 아니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
③ 친생부모는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입양정보 공개 사전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사전 동의 신청 및 철회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(친가족 찾기의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·지방자치단체·아동권리보장원·입양기관·보장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(이하 “정보연계시스템”이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만남과 교류를 위하여 유전자 검사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가 만날 수 있도록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축·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 및 제11조제2항 따른 실종아동등 신고·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유전자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실종아동의 신상정보(이름·나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) 및 유전자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 및 유전자정보의 범위 확인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(입양기록에 관한 조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가 된 사람과 그의 1촌 이내 직계비속이 그의 친생부모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정보에 대하여 해당 입양절차와 관련된 공공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게 보고 요구·자료제출 요구 등을 명하거나 현장조사·문서열람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, 조사 절차·방법 및 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경찰관서, 공공기관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(이하 “아동복지시설”이라 한다),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이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38조(비밀유지의 의무) 아동권리보장원, 아동복지시설, 제11조제3항

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, 제11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32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5장 보칙

제39조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,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·감독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경비의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1. 제11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
2. 제18조에 따른 입양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비용

3. 제3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

제6장 벌칙

제41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3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

제4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등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
2.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
3.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
4. 제3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9조제2항에 따른 결연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양자가 될

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은 자

2.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입양전제위탁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에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인도받은 자

③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4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양정보 공개청구 및 친가족찾기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 및 그의 1촌 이내 직계비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 입력에 관한 적용례) 시·도지사 또는 시

장·군수·구청장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, 종전의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및 입양 전 아동을 보호했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벌칙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와 그 벌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입양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7조(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제8조(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9조제1항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2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3호 중 “「입양특례법」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”을 “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아동”으로 한다.

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 중 “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”를 「입양특례법」 제39조“로 한다.

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5호 중 “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”를 “「입양특례법」 제39조”로 한다.

제1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입양특례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